

제1부

농어민후계자, 우리는 누구인가?

*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월간 한농연”은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후 20년 격동의 역사를 겪어 온 한농연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총 10회 연재되는 “한농연 격동의 20년”은, 한농연 농권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 - 편집자 주 -

※ 향후 연재계획

제1부 : 농어민후계자, 우리는 누구인가?

제2부 : 자주적 농권운동 단체로의 재정립

제3부 : 유통사업단과 품목별전국협의회 운영

제4부 : 농협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제5부 : 농축협조합장 및 지방의회 진출 운동

제6부 : “WTO Kills Farmers” 세계화에 희생된 뛰어난 농민 이경해

제7부 : 아스팔트 농사의 열기 속에서

제8부 : 대선 후보 농정공약 채택 촉구 운동

제9부 : 농업계 내 사회적 협의기구 추진 운동

제10부 : 농업경영인, 우리는 누구인가?

“농어민후계자, 우리는 누구인가?”

1989년 8월 17일, 덕유산 자락에 올려퍼진 1만 농어민후계자 가족들의 힘찬 함성은 몽클한 감동이었다.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세살박이 신생 조직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전후협, 한농연의 전신)가, 17년 뒤 한국 농권운동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되는 첫 번째 발자국이였다. 관청과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무릅쓰고 스스로의 힘으로 덕유산에 모인 이들의 화두는 “농어민후계자, 우리는 누구인가?”였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는 지금까지도 한농연 회원과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후협, 출범의 모태를 찾아서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업의 출발은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부터였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국보위 상임위 결정을 통해 부정축재자 기부재산 중 395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 재원으로 연리 5%,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교육 및 용자지원을 시작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기 총인원이 5만명으로 육박하면서 농어민후계자는 도·시군·읍면별로 다양한 모임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1983년 조직된 경남도연합회와 충북 영동군의 후계자 조직 등이 유통사업에 눈을 뜨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같은 후계자들의 활발한 초기 활동이 이뤄지던 1987년, 민주화로 정권 재창출의 위기에 봉착한 민정당 선거팀은 농어민후계자 조직 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그 해 10월 지역별 후계자 조직과 한국농축수산물유통연구원(당시 ‘한국농어민신문’의 전신인 타블로이드 판 ‘농축수산물유통정보’를 발행) 등의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후계자 조직 구성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987년 12월 9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이하 전후협, 초대 회장 이흥기)’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후협은 대선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가운데 1987년을 마무리하였다.

전후협, 초보적인 정체성의 모색과 농권운동의 전개

정관 채택 및 임원선출, 가락시장 내 사무실 개소까지 끝났지만, 전후협은 초기 조직의 정체성 형성의 문

제에 직면하였다. 유통사업 등을 위한 각 도·시군·읍면별 조직이 활동중이었으나, 일사천리로 이뤄진 전국 조직의 결성 탓에 지역 조직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일단 전후협은 유통사업을 직접 추진기로 하고, 자본금 1억원으로 (주)농어민후계자 유통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이외에도 전후협은 농정활동에도 나섰다. 농어가부채 경감 대책 등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자 의식조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1988년 여름 강원도 횡성군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후계자 출신 진기선씨에 대해 '사업장 이탈'을 이유로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전후협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부에 강력 항의하여 9월 6일 농림수산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는 향후 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지방의원·단체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가능케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8년 3월 30일,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 사무국장이 한국경제신문에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기조의 글을 게재하여 농업계 내에 파문이 확산되었다. 이후 전후협은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5월 27일 백만인 서명운동에 나섰고, 6월 23일에는 대우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우그룹은 8월 8일 공식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9월 7일 김우중 회장이 전후협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후계자에 대한 정부의 견제, 폭우 속 절규 ‘성환대회’의 아픔

1989년 전후협은 제주도협회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도약의 기틀을 잡았다. 새로 취임한 2기 집행부(2대 회장 이경해)는 협동조합 개혁 등을 내세우며 농민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한농연 20년 역사에서 조직활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현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처음 열린 것도 1989년의 일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인 1만명에 이르는 후계자와 가족들은, 농어민후계자의 세력화를 우려한 정부와 경찰의 방해 움직임을 이겨내고 제1회 전국대회를 당당히 치러냈다.

하지만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정부의 견제 움직임은 보다 명확해졌다. 정부는 1990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40세를 기준으로 4-H 구락부·농어민후계자·전업농으로 인력수급의 3단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1990년 1월부터 후계자 사후관리 제도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전후협은 ‘후계자육성기금법 폐지반대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특히 농촌진흥청으로 사후관리 기능을 이관하고 40세를 기준으로 인력정책을 이원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조직분열책이자 정부의 명확한 농업포기 정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정부와 전후협의 긴장은 최고조로 다다랐으며, 결국 1990년 8월 18일 ‘성환대회’로 기록된 제2회 전국대회의 파행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서울 여의도와 한강 고수부지, 미사리 조정경기장(현재 미사

리 경정경기장에서)에서의 대회 개최가 원천봉쇄된 것이다. 정부는 천원군 성환읍(현 천안시 성환읍) 소재 국립 종축장에서 행사를 치를 것을 제안했으나, 회원들은 폭우 속에서 텐트를 칠 장소마저 마련하지 못한 채 절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경해 회장, 제네바에서 할복 자결 시도

‘성환대회’의 상처가 아물어 갈 그 해 늦가을 아침, TV 뉴스를 타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전후협 이경해 2대 회장이 제네바에서 할복 자결을 기도하여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진행중이던 제네바를 방문했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후 2003년 9월 11일, WTO 각료회의가 진행중이던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는 “WTO가 농민들을 다 죽인다, WTO 협상에서 농업을 제외하라!”고 외치며 자결하였다. 이경해 열사의 삶을 관통해 온 투쟁의 흐름은 “월간 한농연” 9월호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전후협, 정체성 형성의 험난한 여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농연의 전신인 전후협은 1987년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지금껏 한농연을 ‘관변단체’, ‘어용단체’로 폄하하는 일부 인사와 단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출발점 자체의 문제만을 따지며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정체성을 폄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1987년 창립총회 이후 1990년 가을까지 이어진 험난한 여정을 통해, 전후협은 우리 농업을 지키고 개혁해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씩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농연은 수입개방 확대 등 총체적인 농업 위기에 맞서 씩씩한 농민운동과 회원들의 각성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순점을 극복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의 핵심 농민운동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자랑스러운 20년의 역사를 지닌 조직으로 자라났다.

창립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민족의 생명을 지탱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농민의 뜻을 반영할 체제를 못 갖추고’, ‘농수산물 수입으로 생산기반이 허물어지며’, ‘절망감만이 농어촌 사회에 팽배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적극 대응하여 ‘농어촌 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펼쳐나가야 할’ 12만 농업경영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할 핵심 가치가 아닐 수 없다.